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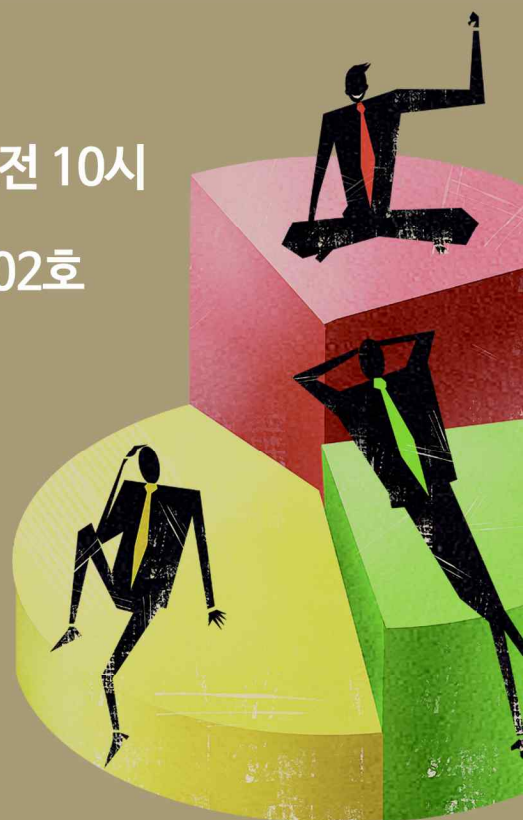
신자유주의가 양극화를 초래했나?

— 소득분배불평등 원인과 완화방안 —

| 일 시 | 2016년 10월 26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순 서 —————■

■ 사 회

- 김 영 봉 (중앙대 명예교수)

■ 발 제

- 조 동 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 박 기 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 오 형 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안 재 옥 (경희대 경제학부 교수)
- 김 영 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질의·응답

■ 폐 회



■———— 목 차 ————■

■ 발 제

신(新)자유주의가 양극화 초래 했는가 07

- 조 동 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소득분배불평등 원인과 완화방안 33

- 박 기 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소득분배불평등 원인과 완화방안 39

- 오 형 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소득불평등 요인과 완화 방안 41

- 안 재 욱 (경희대 경제학부 교수)

신(新)자유주의가 양극화 초래 했는가 43

- 김 영 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신(新)자유주의가 양극화 초래 했는가

-소득불평등 요인과 완화방안-

조 동 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I. 프롤로그

어떤 사람의 생산성(소득)은 그가 가진 ‘능력’과 그에게 따른 ‘운’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능력은 기본적으로 타고난 ‘선천적인 능력’ 즉 유전적 DNA에 의해 정해진다. 이처럼 소득은 통제할 수 없는 ‘선천적 DNA와 운(luck)’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의 크고 작음에 ‘당(當)과 부당(不當)’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개인 소득은 운명적으로 그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

개인들 간의 소득의 차이가 작아지려면, ‘선천적 DNA’가 좋은 사람에게는 ‘운’이 따르지 않아야 한다. 통계적으로 말하면 $X = Y + Z$ 의 관계에서 Y와 Z가 통계적으로 ‘부(負)의 상관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X의 값은 상대적으로 일정범위 내에 들어온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선천적 DNA’(Y)와 ‘운’(Z)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인식했다면 이는 물리적인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다. 미제스(Mises)의 ‘행동인’(homo agens)의 세계에서는 Y와 Z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인식된다. ‘선천적 DNA’가 좋은 사람일수록 일과성(一過性) 운을 ‘기회로 포착’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간의 소득은 원천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이때 불평등은 ‘같지 않다’는 의미에서의 불균등으로 해석되는 것이 순리다. 불평등에 대해 적의(敵意)를 품을 필요가 없다. 불평등이 불공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좌파들은 사람들의 부아(anger)를 자극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양극화’로 프레임(framework)화하고 있다. 양극화하면 누군가가 전체의 몫을 거의 독식해 나머지 사람들은 빈손이 되는 것이 연상된다. 양극화는 증오를 유발한다는 면에서 경제용어가 아닌 ‘정치용어’이다. 양극화는 아무데서나 그리고 아무 때나 쓰인다.

2016년 8월 17일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김경수의원

대표발의)의 제안이유는 이렇게 시작된다.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던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은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성장도 더 이상 불가능함을 증명하고 있음....사회통합을 유지하는 데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 세월호 참사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웠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직시하게 함. 이제는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국가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때임.....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가 경제운영원리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마디로 “신자유주의로 양극화가 추동돼 한국사회가 내부적으로부터 붕괴의 위기에 처해있다”는 대학운동권식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해 더 이상 사회가 지탱될 수 없다면, 자유를 억압하고 평등을 지향한 사회주의가 몰락한 이유는 무엇인 가. 냉철해야 할 경제법안 발의에 세월호가 적정한 인용논거가 될 수 있는 지 의문이다.¹⁾ 그리고 합의하기 어려운 사회적 가치를 입법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실효적인지 의구심이 든다.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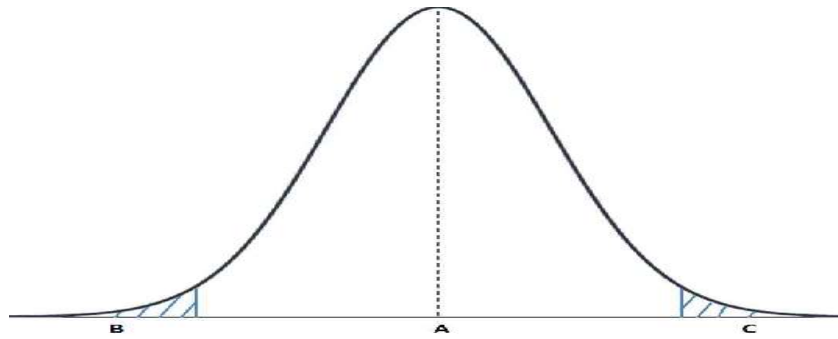
양극화를 엄밀히 정의하지 않고 ‘악마화’ 시켰기 때문에 논의는 늘 제 자리 걸음이다. 위의 논리에 따르면,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가치가 존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극화가 됐다는 것이다.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면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것이다. 목가적(牧歌的) 사회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향수에 젖는 것이 정책은 아닐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추동된 양극화”라는 식의 ‘운동권적 지력의 한계’에 갇히면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결코 완화될 수 없다.

II. 빈곤 vs 불평등: 무엇이 문제 인가?

<그림-1>은 소득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정책적 관심은 어디에 두어져야 하는 가? 그동안 통상적으로 A(평균 소득) 또는 B(빈곤층)에 정책 관심이 두어졌다. 하지만 ‘양극화론자’들은 ‘C/B’의 비율(또는 전체 소득에서 C의 비율)에 관심을 두고 있다. 비율은 분자. 분모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양극화론자들은 분자인 C의 값이 커지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피케티’는 전형적인 양극화론자이다. 하지만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B’이다.

1) 세월호 참사가 우리사회의 민낯을 드러내게 했다면, 세월호 특조위 연장을 둘러싼 갈등은 무엇인 가? 세월호 특조위가 기집행한 150억원이 적정하고, 광화문 광장을 지금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그들에 공감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 가? 그렇다면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민낯을 드러낸 것일 수 있다.

<그림-1> 소득분포



우리는 C에 굳이 관심을 둘 필요는 없다. 그림에도 왜 ‘C’인가? C로 B가 고통 받아서 인가 아니면 C 때문에 B의 빈곤탈출이 여의치 못해서 인가? 후자로 문제를 좁혀보자. GDP는 생산측면에서 새로이 더해지는 ‘부가가치’의 합이기 때문에 고정된 그 무엇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경제가 성장해 파이가 커지면 ‘정합게임’(positive-sum game)이 가능하다. 하지만 점유율에 초점을 두면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 된다. 누구의 점유율이 줄어야 다른 누군가의 점유율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C로 인해 B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앞집의 김서방이 성공하면 뒷집의 박서방은 반드시 실패해야 한다.²⁾ C와 B가 독립이라면,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빈곤층’ B여야 한다.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패자부활전’이 잘 알려진 정책대안이다. 한편 구성원의 ‘소득분포 구조’가 정책목표가 될 수 없다. 소득분포 구조가 정책목표가 되려면 ‘적정 불평등’을 사전에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분배 문제의 본질은 ‘불평등이 아닌 불공정’이며, 불공정을 시정하려면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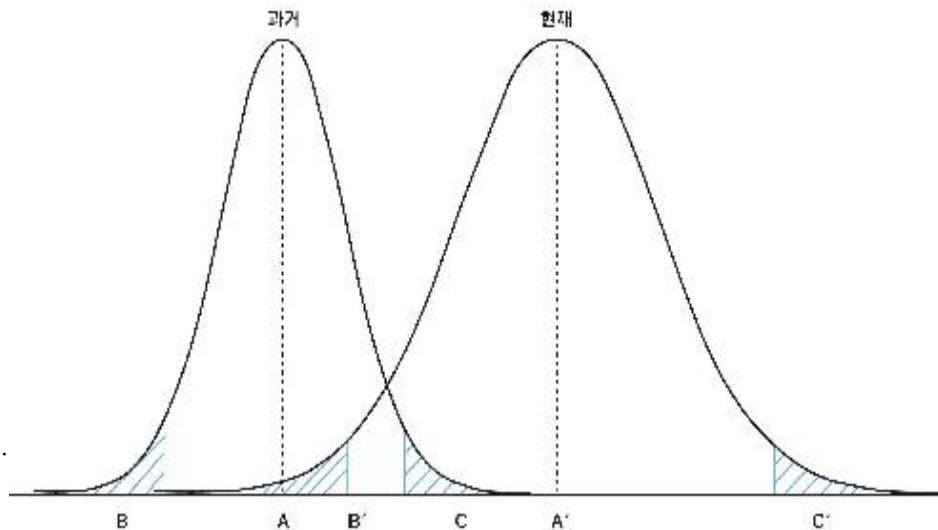
성장론자로 인식되는 노벨상수상자 디턴(Deaton)은 지나친 소득집중은 ‘금권정치’(plutocracy)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금권정치는 가장 타락한 정치일 것이다. ‘지대 추구’가 부를 축적하기 위해 정치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금권정치’는 축적된 부를 이용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브랜다이스 (Louis Brandeis)판사는, 민주정치에 필수적인 정치적 평등은 늘 경제적 불평등에 의해 위협받았으며 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해지면서 민주정치에 대한 위협도 커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계는 여기까지다. C가 금권정치를 낳는 충분조건일 수는 없다.

양극화론자들은 늘 금권정치를 들먹인다. 경제민주화로 경제권력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압도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김종인의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금권정치보다 더 해로운 것이 있다. 바로 포퓰리즘(인기영합) 정치이다. 포퓰리즘 정치 하에서는 “대중이 반길만한 그래서 보다 더 큰 지지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면”이면

2) 그 같은 논리라면 김서방이 건강해서 다른 누군가가 아픈 것이 된다.

그것이 무엇이든 무조건 ‘정책카트’에 담으려 한다. C가 문제이니 “B를 포함한 C이외의 사람들이 연대”해 C를 옥조여야한다는 주장이 그런 류이다.

<그림-2>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분포 곡선의 이동



경제가 성장해 평균소득이 A에서 A'으로 이동하면, 과거의 빈곤층은 ‘절대적 기준’에서 빈곤에서 벗어난다. 빈곤을 절대적으로 접근하면 빈곤은 떨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빈곤을 정의하면 ‘상대적 빈곤’은 영원히 떨칠 수 없다. 이는 인간의 숙명이다. 그렇다면 ‘문제’ 자체가 잘못 정의된 것이다. 최신 스마트 폰을 갖지 못하더라도 알뜰폰을 가지면 된다. 알뜰폰을 가질 수 있으면 ‘절대적 빈곤’을 벗어난 것이다. ‘최신 스마트 폰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닌 ‘알뜰폰을 가진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삶의 질과 후생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면 공존은 불가능하다.

불평등 보다 원초적 빈곤에 더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줄어든다. 하지만 역으로 불평등을 문제 삼는다고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빈곤을 해결하는 첩경은 <그림-2>에서 소득분포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즉 성장페달을 밟는 것이다.

III. 자유주의에 대한 편견과 왜곡

우리는 자유주의 지적 전통을 갖지 못했다. 주자학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자유주의가 뿌리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남을 의식하는 것이 체질화된 문화적 뿌리도 자유주의가 착근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었다. ‘청빈(淸貧)’이란 말이 시사하듯이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심정적 질시가 보편화되었다. 청빈은 탁부(濁富)와 대비된다.

자유주의는 로크(Locke)적 전통에 따라 ‘개인적 자유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념적 조류 및 그러한 이념과 결부된 운동을 의미한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유로운 인간의 사회적 소유에 바탕을 둔 자발적인 교환체계인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하는 지적 조류를, 경제적 신(新)자유주의는 케인즈(Keynes)류의 정부의 시장관여에 반대하면서 케인즈 이전의 고전적 자유주의로 복귀하려는 광범위한 지적 조류를 의미한다.

하지만 자유주의는 불행하게도 근래에 이르러 철학적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그 의미가 왜곡돼 정부의 간섭과 복지정책을 지칭하는 사회민주주의와 동의어로 변질되었다.³⁾ 또한 자유주의는 여타 국민의 희생 위에 자본가와 기업가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이념으로 오도되었다. 반(反)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원리를 실행에 옮기는 사회를 자본가적 사회, 그러한 사회조건을 자본주의라 하면서, ‘자유’의 의미를 폄하(貶下)하고 자유주의적 제도에 대한 그들의 경멸심을 자본주의에 결부시켰다. 그 결과 일반대중의 심성에는 자유주의 하면 이웃을 착취하면서 자신의 부만을 크게 하는 비정한 자본가가 연상되었다.⁴⁾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주의는 어떤 특정집단이 아닌 모든 이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한 최초의 정치운동이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모두 잘 사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다른 것은 추구하는 목표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다. 자유주의가 절대 전제정치 대신 입헌 대의정부 제도를 수립하여 농노제도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예속을 타파하고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고자 한 것은, “자유노동이 노예노동과 견줄 수 없는 만큼 더 생산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자유노동만이 즉 노동의 결과를 전부 향유할 수 있을 때 인간 노동의 생산성이 가장 크게 향상되어 모든 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⁵⁾ 따라서 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조직된 사회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이웃이 원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가장 잘 제공하는 것이다. 이점이 바로 계급 신분사회가 누릴 수 없는 자유주의 사회의 역동성인 것이다.

양극화론자들이 거론하는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필자가 과문한 탓

3) 미 상원의원 클라크(Clark)는 자유주의자의 입장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지닌 모든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을 자유주의자라 정의한다. ...사회를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 정부가 적절한 도구가 된다고 믿는다. (Atlantic지, 1953. 7)”와 같이 피력하였다.

4) 미세스(Mises)는 『자유주의: 1927』에서 자신의 자유주의에 대한 절박한 심적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오로지 사려깊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전적 자유주의가 지녔던 목표와 그것이 이룩한 성과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다가오는 파국 이후에 자유의 정신이 부활될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데 있다....”

5) 노예가 노예제도를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 생활필수품을 대주었으므로 자신이 일용할 양식을 장만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예는 노예제도 자체를 해악으로 여기지 못했다. 만약 노예가 자유노동을 하면, 주인으로부터 보장받은 생활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자유노동은 모든 이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미세스: 1927)

도 있겠지만 그들은 신자유주의의 본질에 대해 깊이 천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럴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단일 것이다. 하지만 천착할 동기는 전혀 없어 보인다. 그들의 관심사는 신자유주의를 ‘악마화’(demonize)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유주의에 ‘신(新)’을 덧씌워 자유주의에 낙인을 찍으려 했다. 신자유주의는 레이건과 대처 집권 이후 “작은 정부, 규제완화, 민영화”로 정형화됨으로써 시장만능주의로 축소 해석되었으며, 워싱턴 컨센서스(consensus)를 바탕으로 한 대국의 논리로서 제국주의의 또 다른 변형으로 왜곡되었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국내적으로는 강자의 탐욕충족을 정당화시키는 이념으로, 국가 간에는 빈국을 영원히 빈국으로 남게 하는 패권주의로 매도되었다. 이 같은 왜곡은 사회주의자들의 고질적인 계급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자유주의가 별개일 수 없다. 신자유주의가 양극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소통불능이 됐다는 그들의 주장은 판박이다. 그렇다면 전술한 바와 같이 평등을 지향하고 자유를 억압한 사회주의가 왜 붕괴했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III. 양극화를 초래한 요인

양극화 해소를 정말 원한다면 간단한 방법이 있다. 미국을 예로 들면, 성공한 기업가로서 억만장자를 제외시키면 소득불평등도는 완화될 것이다. 한국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한 기업의 창업주를 제외시키면 소득불평등도는 많이 내려간다. 성공한 사람이 없는 ‘실패한 사회’는 평등한 사회이다. 진정 그런 사회를 바라는 가. 경주의 최부자집은 이제는 전설 속의 가문으로 내려앉았다. 차라리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더라도 경주 최부자집이 큰 기업으로 성공했다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양극화를 소득분배 불평등으로 고쳐 쓸 때, 양극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공통된 문제이다. 미국, 영국 등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양극화는 상당정도, ICT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산구조’의 변화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 분업’의 심화에 연유하고 있다. 경제가 산업화 단계를 넘어 지식기반 사회로 발전할수록 전문서비스와 같은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소수에게’ 집중된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이 같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가 양극화에 일조(一助) 하고 있다. 그리고 고학력 사회로 갈수록 임금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임금이 비싸지다 보니 제조업이 중국 등으로 이동해 전통적인 블루컬러의 소득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었다.⁶⁾

중산층을 복원하고 소득불평등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산업발

6) 하지만 세계의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중국,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는 중산층이 빠르게 두터워지고 있다. 세계는 그만큼 평평해졌다(flat)고 볼 수 있다.

전 단계에 걸 맞는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분노와 증오’를 표출한다고, 신자유주의라는 ‘가상의 적’을 공격한다고, 사회적경제를 외친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혁신을 통해 지식기반 사회에 걸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낙후된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IV.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의 관계: 한국경제 있는 그대로 보기:

정책적 사고가 왜곡되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하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의 단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보는 데서 찾아진다.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보자.

소득분배와 성장을 관련 자료는 한국은행 on-line DB와 KOSIS(국가통계포털)에서 취합했다. 지니계수는 ‘도시2인 이상’을 기준으로 수집했다. 우선 ‘도시 2인 이상’ 기준이 1990년부터 가장 긴 시리얼(serial)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과 1인 가구를 포함한 지니계수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나 통계가 정비돼 충분한 관찰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농촌과 1인 가구가 빠져있지만, 농촌인구 비중은 높지 않으며 1인 가구도 최근의 현상이기 때문에, ‘도시 2인 이상 기준’을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본 연구는 “도시에서 결혼해 2인 이상 가구”를 꾸린 가장 전형적인 가구에 대한 분석이다.

각종 분배지표는 <표-1>에 정리돼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하나의 숫자로 압축해 표현하지만 불평등 구조를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계층별 비율(비중)의 추이를 추가했다. ‘빈곤층’은 중위소득의 50%이하를,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150%를, ‘부유층’은 중위소득의 150% 이상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1990년 현재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의 비율은 각각 7.8%, 73.7%, 18.5%로 나타났다. 2015년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빈곤층은 두터워졌고(7.8->14.2%), 중산층은 얇아졌으며(73.7->67.3%), 부유층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시장소득기준으로 1990년 0.266에서 2015년에는 0.305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배율은 최하위 20% 소득계층의 평균소득을 분모로, 최상위 20% 소득계층의 평균소득을 분자로 놓고 계산한 지표이다.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1990년 3.93배에서 2015년 5.67배로 확대되었다. 5분위배율은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하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된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각종 지표는 정부의 재분배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은 그만큼 완화된다. 2015년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계층별 비중을 보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비해, 중산층의 비율은 두터워지고(67.3 -> 72.6%) 빈곤층과 부유층의 비중은 얇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표-1> 도시(2인 이상 비농가)부문 지니계수, 5분위배율 및 소득계층별 비중

	1990		2015	
	시장소득기준	가처분소득기준	시장소득기준	가처분소득기준
빈곤층 (중위소득 50% 이하)	7.8%	7.1	14.2	10.4
중산층 (중위소득 50~150%)	73.7%	75.4	67.3	72.6
부유층 (중위소득 150% 이상)	18.5%	17.5	18.5	17.0
합계	100%	100%	100%	100%
지니계수	0.266	0.256	0.305	0.269
5분위배율	3.93	3.72	5.67	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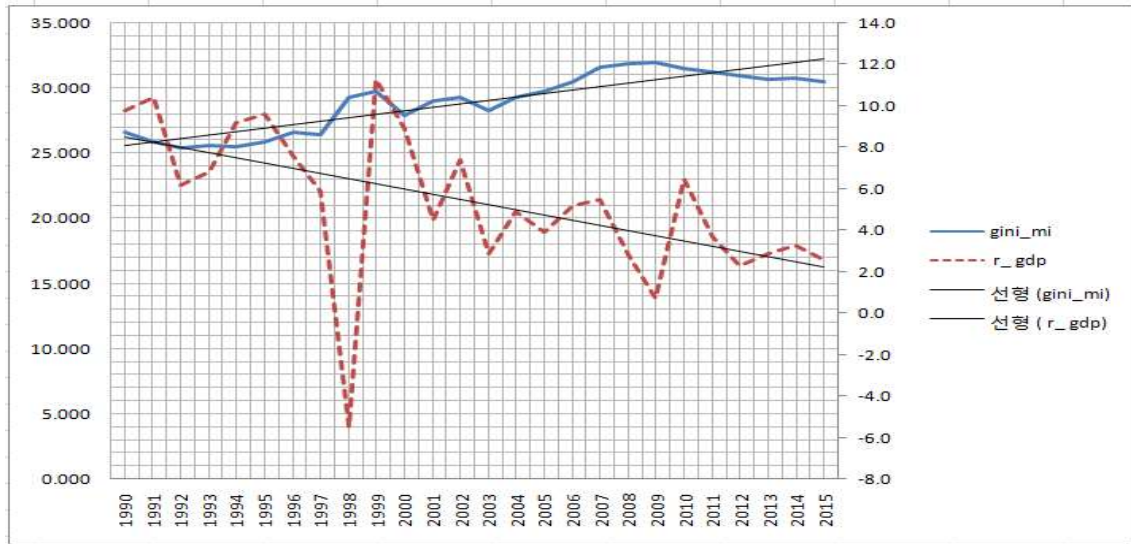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DB, KOSIS

1) 지니계수와 실질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

<그림-3>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6년간 지니계수와 실질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⁷⁾ 지니계수는 추세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큰 파동 속에는 “경제성장률에 따라 소득분배가 개악되고 개선되는 작지만 뚜렷한 파동”이 존재한다. 1998년의 IMF 외환위기와 2008년의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 모두 지니계수를 악화시켰고, 위기 이후 경기회복기에는 예외 없이 지니계수가 개선됐다. 이로써 추세적으로 그리고 국지적으로 “성장률이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4>는 시장소득 대신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와 실질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3>과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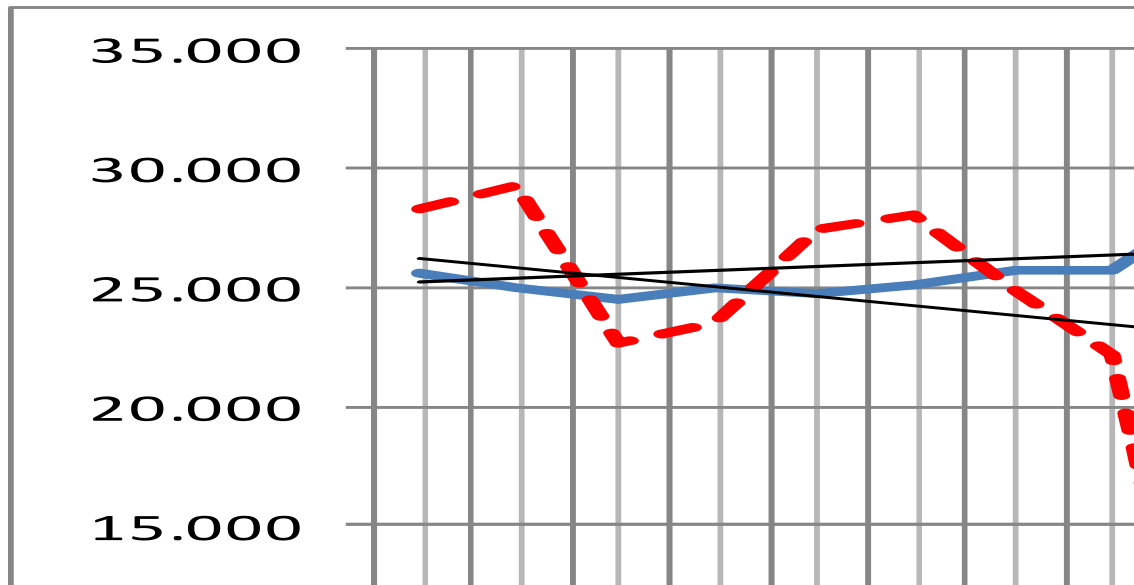
7) 그림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지니계수에 10을 곱해 좌축에 표시했다.

<그림-3> 시장소득기준 지니계수(gini_mi)와 실질경제성장률(r_gdp) 관계



주) 좌축이 지니계수, 우축이 실질경제성장률

<그림-4> 가처분소득기준 지니계수(gini_di)와 실질 경제성장률 관계



주) 좌축이 지니계수, 우축이 실질경제성장률

<표-2>는 <그림-3>과 <그림-4>를 회귀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q-1)과 (eq-3)을 보면 실질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q-1)의 실질경제성장률 계수의 절대값이 (eq-3)의 그것보다 큰 것은 직관에 부합한다. 이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시장소득으로 평가한 분배개선 효과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eq-2)와 (eq-4)는 ‘실질경제성장률과 연도’를 곱한 복합변수를 추가 설명변수로 채택하

고 회귀 분석한 것이다. <그림-3>에서 보듯이, 지니계수는 추세적으로 악화돼 왔다. 따라서 ‘시간변수의 영향’을 회귀분석에서 고려해야 한다. (eq-2)을 보면, 실질경제성장률이 1단위 증가하면, “0.0523”만큼 지니계수가 개선(-)된다. 하지만 복합항이 있기 때문에 실질경제성장률이 1단위 증가할 때, 지니계수는 “0.0436”만큼 누적적으로 악화된다.⁸⁾ (eq-2)와 (eq-4)를 볼 때, 각 설명변수의 계수 값은 직관에 부합한다. 즉 (eq-4)의 계수의 절대 값이 (eq-2)에 비해 작은 것은 재분배정책의 효과가 더해졌기 때문이다.⁹⁾

<표-2> 실질경제성장률과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간의 관계에 관한 추정식

	시장소득 지니계수	시장소득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
	(eq-1)	(eq-2)	(eq-3)	(eq-4)
상수항	3.0743 (0.07)***	2.9198 (0.05)***	2.8532 (0.05)***	2.7538 (0.04)***
실질경제성장률 (r_gdp)	-0.0337 (0.01)***	-0.0523 (0.01)***	-0.0234 (0.01)***	-0.0354 (0.01)***
실질경제성장률, 연도 복합변수 (r_gdp*time)		0.0436 (0.01)***		0.0281 (0.01)***
F 값	9.72	34.37	9.10	21.47
adj_R_square	0.259	0.727	0.245	0.621
표본수	26	26	26	26

주: 괄호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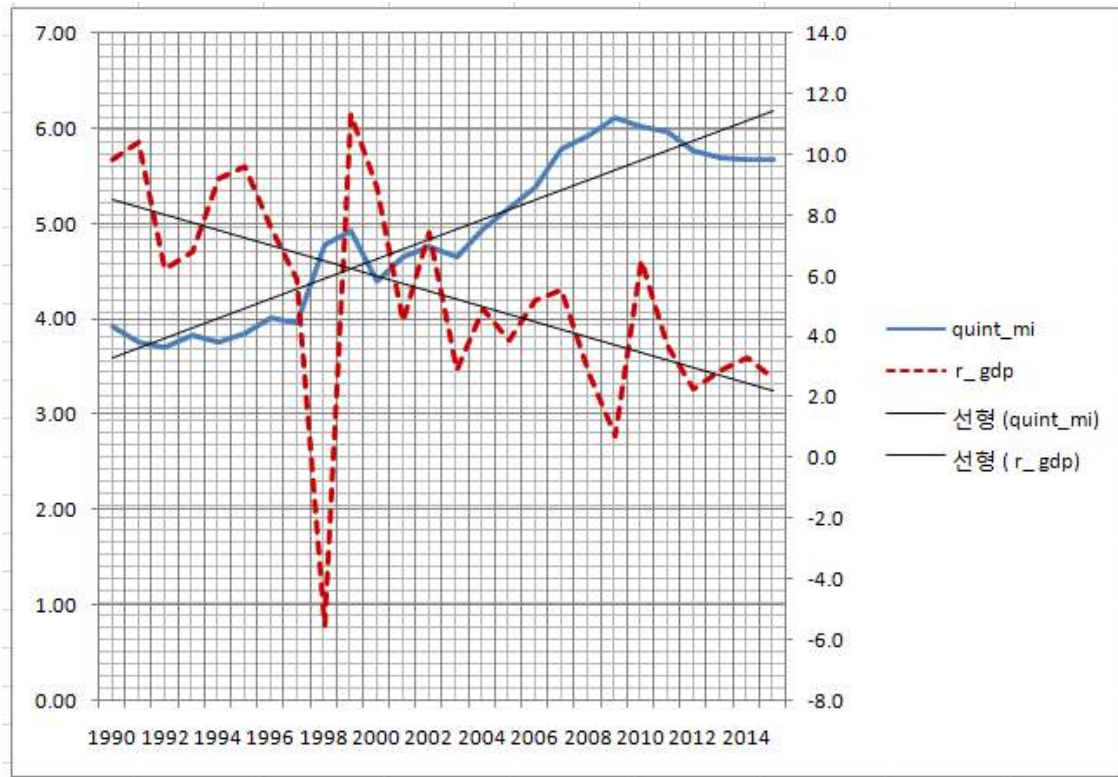
2) 5분위배율과 실질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

<그림-5>는 시장소득기준 5분위 배율과 실질경제성장률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5분위 배율은 추세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와 같이, ‘국지적’으로 “경제성장률에 따라 소득분배가 개악되고 개선되는 작지만 뚜렷한 파동”이 존재한다. 1998년의 IMF 외환위기와 2008년의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모두 5분위 배율을 악화시켰고, 위기 이후 경기회복기에는 예외 없이 5분위 배율이 개선됐다. 이로써 다시 한 번 추세적으로 그리고 국지적으로 “성장률이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8) (eq-2)식을 r_gdp에 대해 편미분하면, ‘gini_mi10’의 추정치는 “- 0.0523 + 0.0436*time”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0.0436씩 만큼 지니계수가 악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니면 (eq-2)식을 시간(time)에 대해 편미분해도 같은 결과(0.0436*r_gdp)를 얻을 수 있다.

9) (eq-3)과 (eq-4)는 피설명변수가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이기 때문에, (eq-1)과 (eq-2)에 비해 각 설명변수 계수의 절대값이 작게 나타나 있다.

<그림-5> 시장소득기준 5분위배율(quint_mi)과 실질경제성장률의 관계



주: 좌축이 5분위 배율, 우축이 실질경제성장률

<표-3>은 <그림-5>를 회귀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q-5)와 (eq-6)을 보면 실질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5분위배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eq-5)의 실질경제성장률 계수의 절대 값이 (eq-7)의 그것보다 큰 것은 직관에 부합한다. 이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시장소득으로 평가한 분배개선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q-6)과 (eq-8)은 ‘실질경제성장률과 연도’를 곱한 복합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고 회귀 분석한 것이다. <그림-5>에서 보듯이, 5분위배율은 추세적으로 악화돼 왔다. 따라서 ‘시간변수의 영향’을 회귀분석에 고려해야 한다. (eq-6)을 보면, 실질경제성장률이 1단위 증가하면, 5분위배율이 “0.1959”만큼 개선(-)된다. 하지만 복합항이 있기 때문에 실질경제성장률이 1단위 증가할 때, 5분위배율은 “0.1632”만큼 누적적으로 악화된다.¹⁰⁾ (eq-6)과 (eq-8)을 볼 때, 각 설명변수의 계수 값은 직관에 부합한다. 즉 (eq-8)의 계수의 절대 값이 (eq-6)에 비해 작은 것은 재분배정책의 효과가 이미 반영됐기 때문이다.

10) (eq-2)식을 r_gdp 에 대해 편미분하면, ‘gini_mi10’의 추정치는 “ $-0.0523 + 0.0436 \cdot time$ ”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0.0436씩 만큼 지니계수가 악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니면 (eq-2)식을 시간(time)에 대해 편미분해도 같은 결과($0.0436 \cdot r_gdp$)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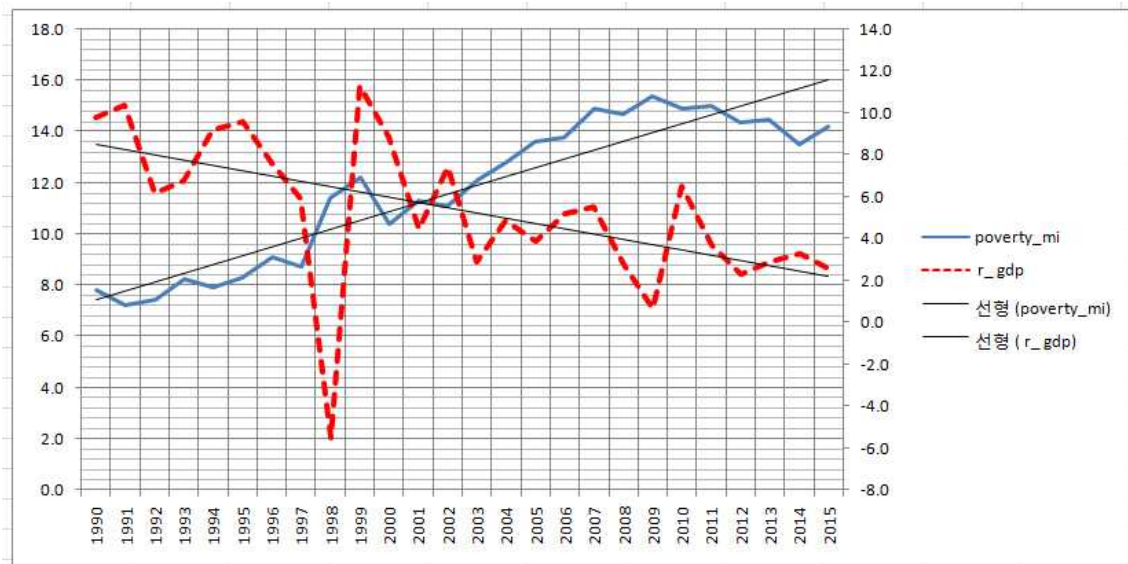
<표-3> 실질경제성장률과 시장소득 5분위배수 관계 추정식

	시장소득 5분위배수	시장소득 5분위배수	가처분소득 5분위배수	가처분 소득 5분위배수
	(eq-5)	(eq-6)	(eq-7)	(eq-8)
상수항	5.5678 (0.26)***	4.9898 (0.18)***	4.6550 (0.14)***	4.3577 (0.11)***
실질경제성장률 (r_gdp)	-0.1264 (0.04)***	-0.1959 (0.03)***	-0.0704 (0.02)***	-0.1061 (0.02)***
실질경제성장률, 연도 복합변수 (r_gdp*time)		0.1632 (0.02)***		0.0840 (0.02)***
F 값	9.889	35.51	10.06	26.39
adj_R_square	0.262	0.734	0.266	0.670
표본수	26	26	26	26

주: 괄호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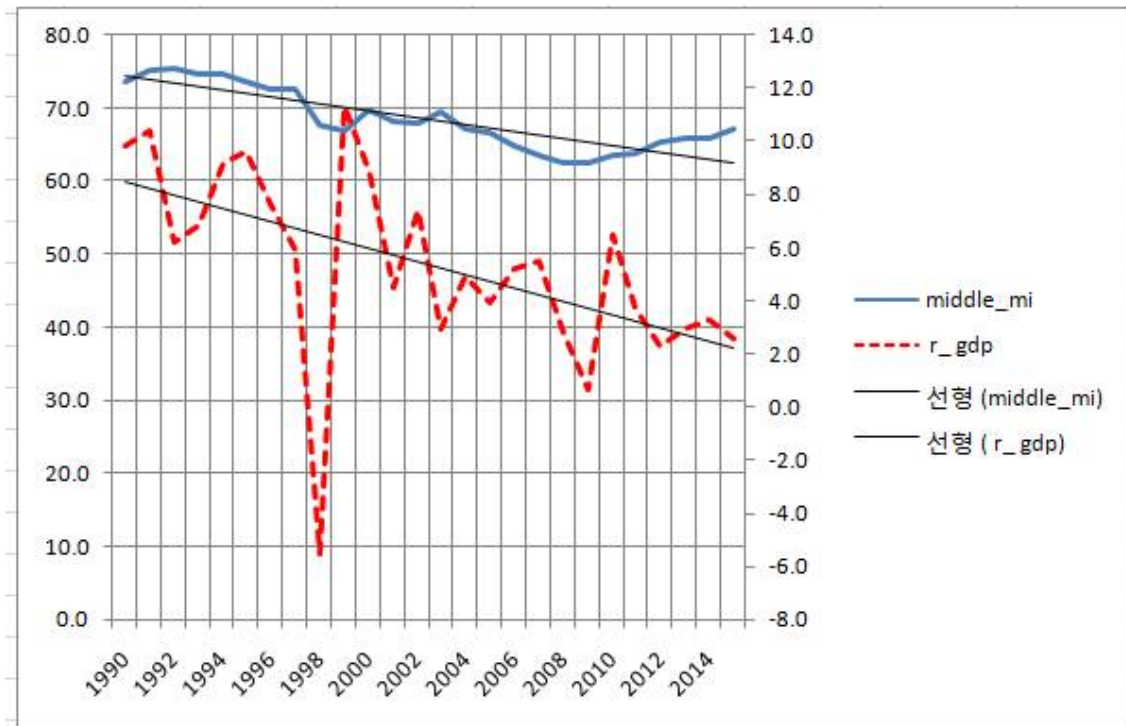
3) 빈곤층 및 중산층 비율과 실질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

<그림-6> 시장소득기준 빈곤층비율(poverty_mi)과 실질경제성장률 관계



주: 좌축이 빈곤층비율, 우축이 실질경제성장률

<그림-7> 시장소득기준 중산층비율과 실질경제성장률 관계



주: 좌축이 중산층비율, 우축이 실질경제성장률

<그림-6>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빈곤층비율(비중)과 실질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빈곤층 비율은 추세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서와 같이 ‘국지적’으로, “경제성장률에 따라 소득분배가 개악되고 개선되는 작지만 뚜렷한 파동”이 존재한다. 1998년의 IMF 외환위기와 2008년의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모두 빈곤층 비율을 높였고, 위기 이후 경기회복기에는 예외 없이 빈곤층 비율이 낮아졌다. 앞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소득분배 지표를 무엇으로 잡든 추세적으로 그리고 국지적으로 “성장률이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빈곤층의 비율을 낮추려면 성장률을 높여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7>은 시장소득기준 중산층 비율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추세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중산층의 비중도 점차 낮아짐을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국지적으로 볼 때, 1999년 2010년 같이 위기극복 후에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때 중산층의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최근 들어 경제성장률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비율이 높아진 것이 관찰된다. 이는 ‘1인 가구’ 급증으로 통계적으로 “도시 2이상 가구의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인식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중산층 비율 확대를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4>은 <그림-6>과 <그림-7>의 시장소득기준 빈곤층 비율과 중산층 비율을 각각 실질 경제성장률에 대해 회귀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4>의 추정결과는 사전적 예측과 정확히 부합한다. (eq-9)식에서 실질경제성장률이 한 단위 증가하면 시장소득기준

빈곤층을 '0.4344'만큼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eq-10)을 보면 경제성장률이 한 단위 증가하면 빈곤층을 '0.6768' 만큼 감소(-)시키지만 추세적으로 빈곤층은 '0.5695'만큼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eq-11)은 시장소득기준 중산층 비율을 실질 경제 성장률에 회귀 분석한 것으로, 경제성장률은 한계적으로 '0.6176'만큼 중산층을 두텁게 함을 알 수 있다. (eq-12)은 (eq-11)에 복합항을 추가한 것으로, 시간이 누적됨에 따라 중산층 비율이 얇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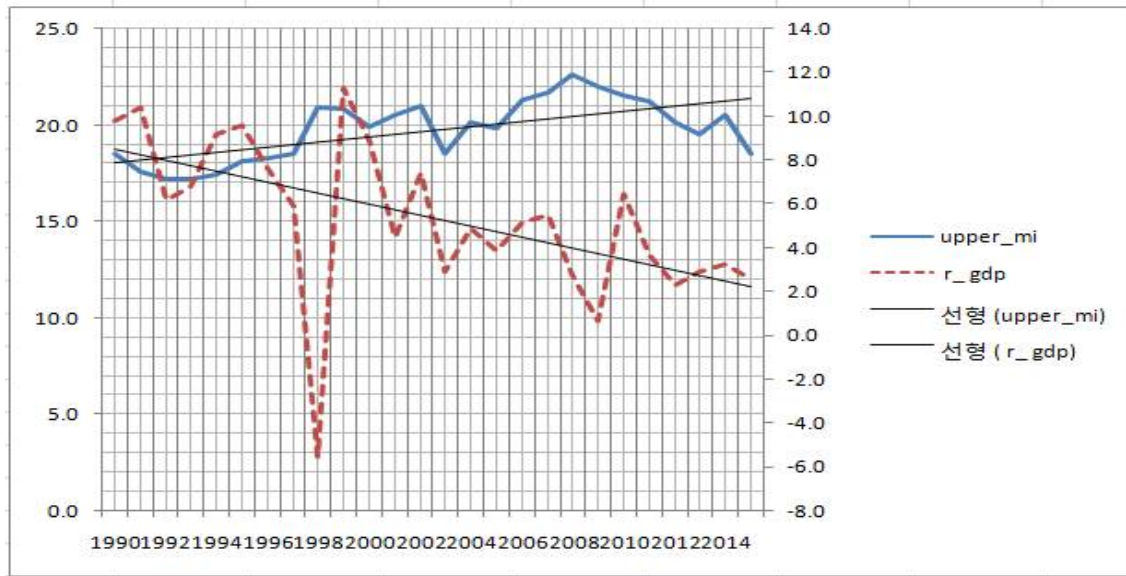
<표-4> 실질경제성장률과 시장소득 기준 빈곤층 및 중산층 관계 추정식

	시장소득 빈곤층 (eq-9)	시장소득 빈곤층 (eq-10)	시장소득 중산층 (eq-11)	시장소득 중산층 (eq-12)
상수항	14.0504 (0.85)***	12.0336 (0.52)***	65.2334 (1.29)***	68.1717 (0.86)***
실질경제성장률 (r_gdp)	-0.4344 (0.13)***	-0.6768 (0.08)***	0.6176 (0.20)***	0.9708 (0.13)***
실질경제성장률, 연도 복합변수 (r_gdp*time)		0.5695 (0.07)***		-0.8297 (0.12)***
F 값	10.71	50.34	9.413	37.75
adj_R_square	0.280	0.798	0.252	0.746
표본수	26	26	26	26

4) 부유층 비율과 실질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

<그림-8>은 시장소득기준 부유층 비율과 실질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추세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부유층의 비율이 완만하게나마 두터워짐을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국지적으로 1999년, 2010년 같이 위기극복 후에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때 부유층 비율이 낮아짐을 관찰할 수 있다. 다만 부유층 비율이 낮아진 것은 '중산층 비율이 높아진 결과'(mirror image)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림-8> 시장소득기준 부유층 비율(upper_mi)과 실질경제성장률 관계



주: 좌축이 부유층비율, 우축이 실질경제성장률

<표-5> 실질경제성장률과 시장소득 기준 부유층 간의 추정식

	시장소득 부유층 (eq-13)	시장소득 부유층 (eq-14)	가처분소득 부유층 (eq-15)	가처분소득 부유층 (eq-16)
상수항	20.7260 (0.53)***	19.7844 (0.48)***	19.3602 (0.44)***	18.6004 (0.41)***
실질경제성장률 (r_gdp)	-0.1843 (0.08)**	-0.2975 (0.07)***	-0.1361 (0.07)*	-0.2275 (0.06)***
실질경제성장률, 연도 복합변수 (r_gdp*time)		0.2659 (0.07)***		0.2146 (0.06)***
F 값	9.413	37.75	3.876	10.13
adj_R_square	0.252	0.746	0.103	0.422
표본수	26	26	26	26

주: 괄호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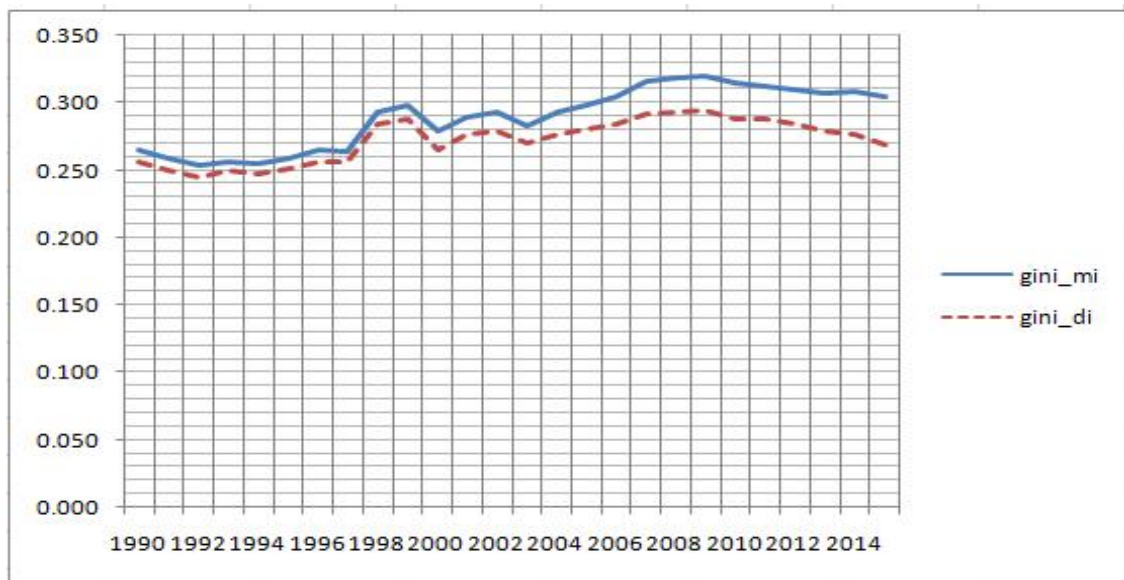
<표-5>는 <그림-8>에 대한 회귀분석이다. <표-5>의 추정결과는 사전적 예측과 부합하지만, 추정의 신뢰도는 앞의 분석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부유층의 비율을 낮추지만 통계적으로 신뢰성은 많이 나빠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eq-15)의 실질 경제성장률 계수의 유의 수준은 10%이하로 나빠지고 있다. 대신 복합항을 추가한 (eq-14)와 (eq-15)는 양호한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전적 예측대로 추세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유층의 비율은 증가하며, 경제성장률이 높아짐에 따라 부유층의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산층이 두터워진 결과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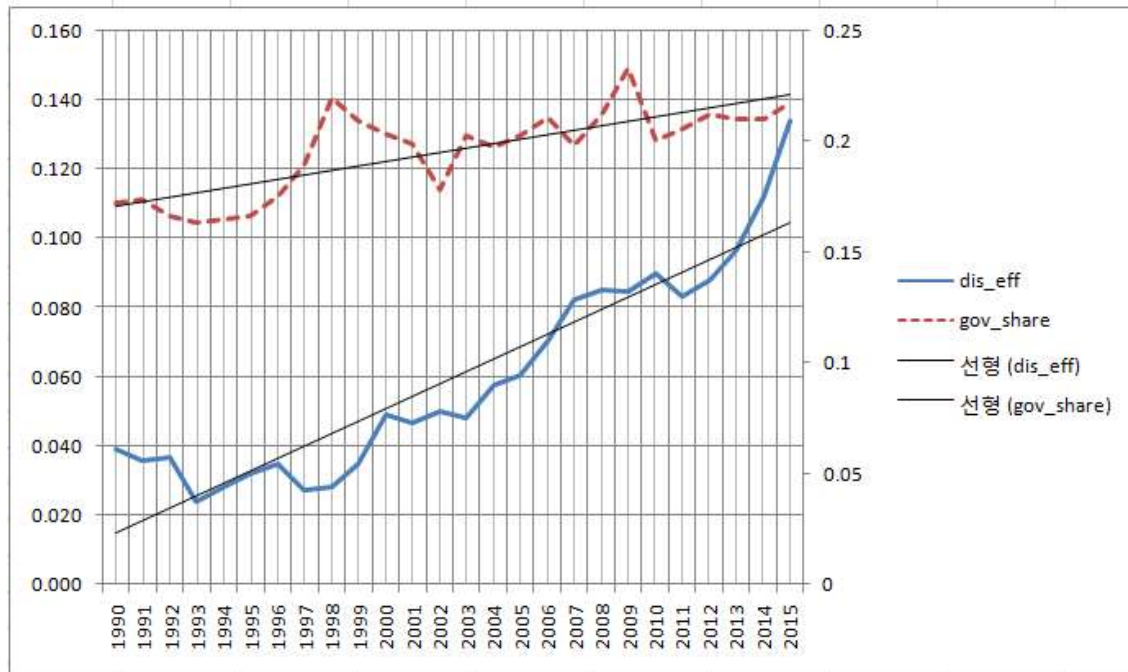
5) 정부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추정

<그림-9>는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한 재분배 효과를 표시한 것이다. 시장소득기준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가 바로 재분배효과인 것이다. <그림-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8년 이후부터 재분배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0>은 재분배효과와 명목 GDP 대비 중앙정부총지출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재분배효과는 “(시장소득지니계수 - 가처분소득지니계수)/가처분소득지니계수”로 계산했다. <그림-10>에서 보듯이, 재분배효과(dis_eff)와 중앙정부지출 비중(gov_share)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분배효과는 중앙정부지출 비중과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관찰된다.

<그림-9> 재분배효과: 시장소득(gini_mi), 가처분소득(gini_di) 기준 지니계수



<그림-10> 재분배효과(dis_eff) 와 정부지출비중(gov_share) 관계



좌축이 재분배효과, 우축이 정부지출 비중

<표-6>은 재분배효과에 대한 추정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q-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분배효과는 정부지출비중에 의해 설명된다. 조세 및 재정정책은 저소득층의 분배개선에 초점이 맞춰지므로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소득불평등도를 낮추려면 정부지출비중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정부지출 증가에 의한 소득분배개선의 지속가능성은 사전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만약 정부지출의 과도한 증가가 민간 활력을 저상시켜 경제성장을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한다면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분배개선효과는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eq-18)은 (eq-17)에 노동분배율을 추가한 것이다. 노동분배율은 노동소득분배율로 한국은행의 통계DB에서 인용했다. 한국은행은 노동소득분배율을 추산할 때 자영업자 소득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노동분배율은 피용자보수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노동분배율이 커질수록 재분배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임금인상이 기본적으로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6> 재분배효과 및 노동시장 양극화에 따른 소득분배불평등

	재분배효과	재분배효과	시장소득 지니계수
	(eq-17)	(eq-18)	(eq-19)
상수항	-0.1145 (0.04)***	-0.4129 (0.13)***	2.2521 (0.37)***
정부배분 (gov_share)	0.8688 (0.20)***	0.5587 (0.23)**	
노동배분 (labor_share)		0.0060 (0.00)**	
상대임금 (rel_wage)			0.4783 (0.22)**
상대임금총액 (rel_total wage)			
F 값	18.19	13.62	4.735
adj_R_square	0.407	0.502	0.223
표본수	26	26	14

주: 괄호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V. 간과된 양극화 요인: 노동시장의 양극화

그동안 양극화 원인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규제완화’ 등이 의례적으로 거론돼왔지만 한국사회에서 간과되어 온 양극화의 가장 큰 원천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다. 저금리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자본소득분배율이 높아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근로소득을 가져가는 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가장 절실한 정책과제는 노동개혁이다. 노동개혁의 골간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피하고 생산성에 상응하는 ‘공정임금’ 지급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후자를 보자.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구직·구인 할 수 있다면 시장에서 생산성만큼 임금이 지급되어 공정성이 확보된다. 생산성과 임금이 일치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달성되므로 공정성은 효율성을 내포한다. 생산성에 해당하는 ‘기회임금’이 지급된다면 해고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다른 곳에서 지금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극단적 구호는 그동안 노동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받아왔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 노동조합이라는 보호막이 불공정임금을 낳은 것이다.

한국적 현실에서 대기업 정규직이 철옹성인 이유는 ‘경영상 긴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것은 노동관련 법제가 노동 쪽에 편향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자가 파업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그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사실상 파업을 부추긴 것이다. 파업투쟁을 통해 임금을 거의 매년 임금을 끌어올렸다. 내부자인 조합원의 근로조건은 개선되지만 청년 구직자는 외부자로 남아 ‘내부자-외부자’ 문제가 누적됐다.

귀족노조의 독식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무기대등의 원칙’(equal footing)이 적용돼야 한다. 근로자의 ‘파업권’에 대해 고용자의 ‘경영권’ 즉 대체인력 투입권이 보장돼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비정규직 문제 더 나아가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¹¹⁾

<표-7>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조건 추이를 표시한 것이다. <표-8>은 <표-7>에 대한 요약 통계량이다. 정규직 월임금총액평균은 약 214만원이며, 비정규직 월임금총액평균은 약 126만원이다. 비정규직 임금이 대비시킨 정규직의 상대임금은 1.69배이다. 정규직임금총액은 정규직 종사자수에 정규직 월평균임금총액을 곱해 얻어진다. 비정규직의 임금총액에 대비시킨 정규직 임금총액은 3.353배이다. 정규직이 갖고 가는 임금총액 비중은 $3.353/(1+3.353) = 0.77$ 이며, 비정규직이 갖고 가는 임금총액 비중은 $1/(1+3.353) = 0.23$ 이다. 정규직이 갖고 가는 임금총액비중 77%가 정당한 근거를 갖는지 의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정규직의 고임금은 생산성이 아닌 ‘머리띠와 어깨띠’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정규직은 힘으로써 비정규직의 이익을 침탈한 셈이다.

11) 전체 근로자의 10%도 안 되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나머지 90%의 근로자의 이익을 침탈해 왔다. 귀족노조는 협력업체의 희생을 담보로 파업을 연례화 했다. 대기업 정규직의 기득권이 비정규직 문제, 더 나아가 소득불평등 문제의 본질인 것이다. 정규직의 과보호를 걷어내는 것이 노동개혁의 관건이다.

<표-7> 고용형태별 임금 및 근로조건 추이

		월평균 임금총액 (천원)	사회보험 적용비율(%)			근로자수 (천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2002	전 체	1,325	52.7	55.5	48.0	14,030
	정 규 직	1,456	62.9	65.6	56.2	10,190
	비정규직	977	25.7	28.8	26.2	3,839
2003	전 체	1,466	57.7	59.5	49.8	14,149
	정 규 직	1,678	70.8	72.5	59.7	9,542
	비정규직	1,028	30.5	32.6	29.2	4,606
2007	전 체	1,745	63.2	64.4	55.3	15,882
	정 규 직	2,008	76.3	76.7	64.3	10,180
	비정규직	1,276	40.0	42.5	39.2	5,703
2008	전 체	1,846	64.3	65.6	56.8	16,103
	정 규 직	2,123	77.9	78.9	66.7	10,728
	비정규직	1,293	37.2	39.2	37.0	5,376
2009	전 체	1,852	64.7	67.1	58.9	16,479
	정 규 직	2,201	78.9	79.8	67.6	10,725
	비정규직	1,202	38.2	43.4	42.7	5,754
2010	전 체	1,949	65.0	67.0	58.6	17,048
	정 규 직	2,294	78.4	79.5	67.6	11,362
	비정규직	1,258	38.1	42.1	40.4	5,685
2011	전 체	2,032	65.1	68.3	59.6	17,510
	정 규 직	2,388	79.1	80.9	68.9	11,515
	비정규직	1,348	38.2	44.1	41.6	5,995
2012	전 체	2,104	66.5	69.9	61.2	17,734
	정 규 직	2,460	80.3	82.2	70.4	11,823
	비정규직	1,393	39.0	45.4	42.7	5,911
2013	전 체	2,181	67.6	71.3	62.4	18,240
	정 규 직	2,546	81.2	83.5	71.8	12,295
	비정규직	1,428	39.2	46.2	43.0	5,946
2014	전 체	2,231	67.9	71.4	63.8	18,776
	정 규 직	2,604	82.1	84.1	73.5	12,699
	비정규직	1,453	38.4	44.7	43.4	6,077
2015	전 체	2,297	67.4	71.5	63.7	19,312
	정 규 직	2,696	82.0	84.8	74.0	13,041
	비정규직	1,467	36.9	43.8	42.0	6,271

주:1) 월평균 임금총액은 각 연도 6~8월 평균치

2) 고용보험은 2010년 이후 공식발표와 상이, 이는 2010년부터 통계청이 고용보험 비가입대상인 공무원, 교사, 별정우체국 직원을 분모에서 제외했기 때문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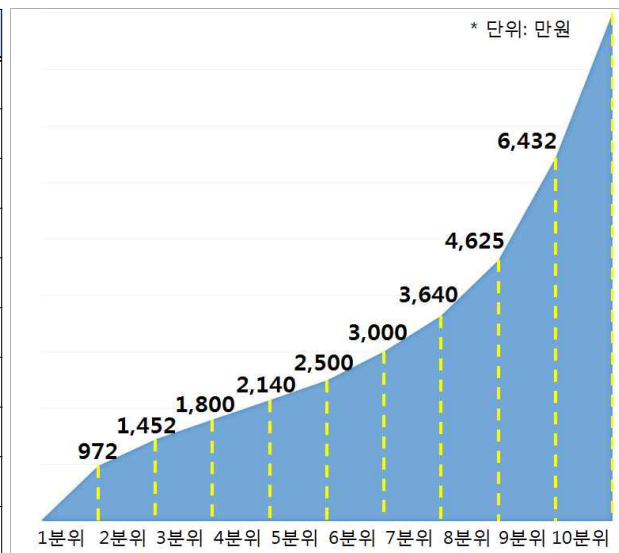
<표-8> 고용형태별 임금 및 임금총액 기초통계량(2002~2015)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수	최소	최대
정규직 월평균임금총액 (worker_wage, 천원)	2,141.4	377.85	14	1,456	2,696
비정규직 월평균임금총액 (tem_worker_wage, 천원)	1,259.2	151.58	14	977	1,467
상대임금 (rel_wage)	1.691	0.12	14	1.49	1.84
상대임금총액 (rel_total_wage)	3.353	0.43	14	2.62	3.96

정규직 노조가 기득권을 공고히 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협력업체 간 임금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핵심 현대자동차의 2015년 정규직 임금평균은 9600만원으로 같은 해 근로자 상위 10% 연봉하한 6432만원을 훨씬 웃돈다. 하지만 1차 협력업체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현대차 정규직의 65%다. 2차는 34%, 3차 30%에 불과하다. 귀족노조가 양극화를 초래한 것이다.

<표-9> 소득분위별 근로자 연봉 하한액(2015)

소득분위(상위%)	연봉하한액(만원)
10분위 (0~10%)	6,432
9분위 (10~20%)	4,625
8분위 (20~30%)	3,640
7분위 (30~40%)	3,000
6분위 (40~50%)	2,500
5분위 (50~60%)	2,140
4분위 (60~70%)	1,800
3분위 (70~80%)	1,452
2분위 (80~90%)	972
1분위 (90~100%)	14



주: 연봉은 정액+초과+특별급여의 합계

자료: 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5년 원시자료)

<표-6>의 (eq-19)는 양극화(소득분배악화)가 비정규직에 대비한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격차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eq-19)에서 '비정규직에 대비한 정규직의 상대임금'(rel_wage)의 유의수준이 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eq-19)식의 표본수는 14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누가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민주노총은 이를 '기업 몫'으로 돌리고 있다. 그들이 언급한 '재벌개혁'은 암묵적으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기업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정규직의 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임금총액을 무턱대고 올릴 수 없다. 임금총액을 올리면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총액 범위 내에서 정규직의 양보가 우선돼야 한다.

VI. 요약 및 시사점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개념을 정의하고 용어를 선택한다. 하지만 반대로 개념과 용어가 현상을 규정할 수도 있다. 용어가 현상을 몰고 가는 경우이다. ‘양극화’가 그렇다. 양극화에는 분노가 묻어 있다. “누군가 부당하게 자기 몫 이상을 가져갔기 때문에 내 몫이 작아졌다”고 믿게끔 돼있다. 예컨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일감몰아주기’가 양극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치부된다. 누군가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고 한편으로 기회를 독식했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란 생각이 들게 된다.

한국적 현실에서 양극화는 분노를 추동시키는 정치용어다. 양극화란 용어 자체를 자제해야 한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성장률과 소득분배간의 관계를 살펴본 바, 추세적으로 성장률은 떨어지고 소득분배가 악화될 것을 목도했다. 경제성장률은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추세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소득분배는 추세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경제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이익이 분화되어 이해관계자가 복잡 다양해질수록 시장 기회를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digital have or have not’이 판을 가르는 것이다. 하지만 실증분석을 통해 중요한 ‘명제’를 하나 발견할 수 있었다. 큰 그림으로 볼 때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가 추세적으로 악화되지만, 그 안에는 “경제성장률에 따라 소득분배가 개악되고 개선되는 작지만 뚜렷한 파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 예외 없이 국지적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되고 경제성장률이 낮을 때 소득분배가 개악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빈곤층은 얇아지고 중산층은 두터워지며 심지어는 부유층 비율도 감소”한다. 따라서 분배개선의 진정한 해법은 성장 페달을 밟아 적정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최근의 체감되는 분배악화는 ‘저성장의 구조화’에 기인한 것이다. 모든 현상에는 근저요인이 있기 마련이다. 느닷없이 ‘저성장의 구조화’가 들이닥친 것은 아니다. 정치권의 인기영합에 따른 ‘경제의 정치화’가 근원적 오류(mother fallacy)이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면 소득분배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어떻게 경제성장률을 높일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관계에 근거한 기초적인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경제적 조직육성, 경제민주화 조치로 양극화를 제어하고 체제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정치적 슬로건에 지나지 않는

다. 분배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도 마찬가지다. “분배를 개선해 분배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 부자가 되는 길을 묻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벌라는 충고와 논리적으로 다를 바 없다.

양극화 완화대책은 결국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으로 좁혀진다. 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입법이 필요한 이유이다. 일각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을 비판하지만 더 경각심을 갖고 경계해야 하는 것은 ‘성장 없는 고용’이다. 세금으로 퍼주기 고용이 지속가능할 수 없다. 남은 선택지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장페달을 밟는 것이다. 그러면 낙수효과를 통해 성장과실이 분배개선으로 이어진다.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간과되어 온 양극화의 가장 큰 원천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다. 민주노총의 핵심 현대자동차의 2015년 정규직 임금평균은 9600만원으로 같은 해 근로자 상위 10% 연봉하한 6432만원을 훨씬 웃돌고 있다. 1차 협력업체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현대차 정규직의 65%에 지나지 않는다. 2차는 34%, 3차 30%에 불과하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통시적으로 볼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갖고 간 임금총액 비중은 각각 ‘0.77’와 ‘0.23’였다. 정규직이 갖고 간 임금총액비중 77%가 정당한 근거를 갖는지 의문이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격한 구호는 그동안 생산성 이상의 즉 기회임금 이상을 가져갔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 정규직의 고임금은 생산성이 아닌 ‘머리띠와 어깨띠’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정규직은 힘으로써 비정규직의 이익을 침탈한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누가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민주노총은 이를 ‘기업 몫’으로 돌리고 있다. 그들이 언급한 ‘재벌개혁’은 암묵적으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기업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정규직의 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임금총액을 무턱대고 올릴 수 없다. 임금총액을 올리면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총액 범위 내에서 정규직의 양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귀족노조는 신자유주의 때문에 양극화가 초래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귀족노조가 양극화의 한축이었다.

끝으로 최근의 1인가구의 급증을 소득분배 악화로 연결시키지 말아야 한다. 1인가구 급증은 별개의 문제이다.//

<부록>

실질 경제성장률은 ‘지니계수 증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지니계수 증가율’은 지니계수가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증가(변화) 했는가를 의미하므로, ‘소득분배 악화정도’로 해석된다. <부록 표-1>은 실질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증가율 간의 관계를 추정한 것이다. (eq-1-1)은 실질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소득분배 악화정도’가 낮아지는, 즉 완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q-1-2)는 (eq-1-1)에 복합항을 추가해 회귀 분석한 것이다. ‘시장소득 지니계수 증가율’은 지니계수와 달리 추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복합항은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추정결과 복합항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q-1-3)은 가처분소득기준 지니계수증가율을 대상으로 추정한 것이다.

(eq-1)과 (eq-1-1)을 같이 묶어 해석하면, 실질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지니계수가 커지는 것’을 즉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어 소득분배를 개선시킨다. 뿐만 아니라 실질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지니계수 증가율’, 즉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정도’를 완화시켜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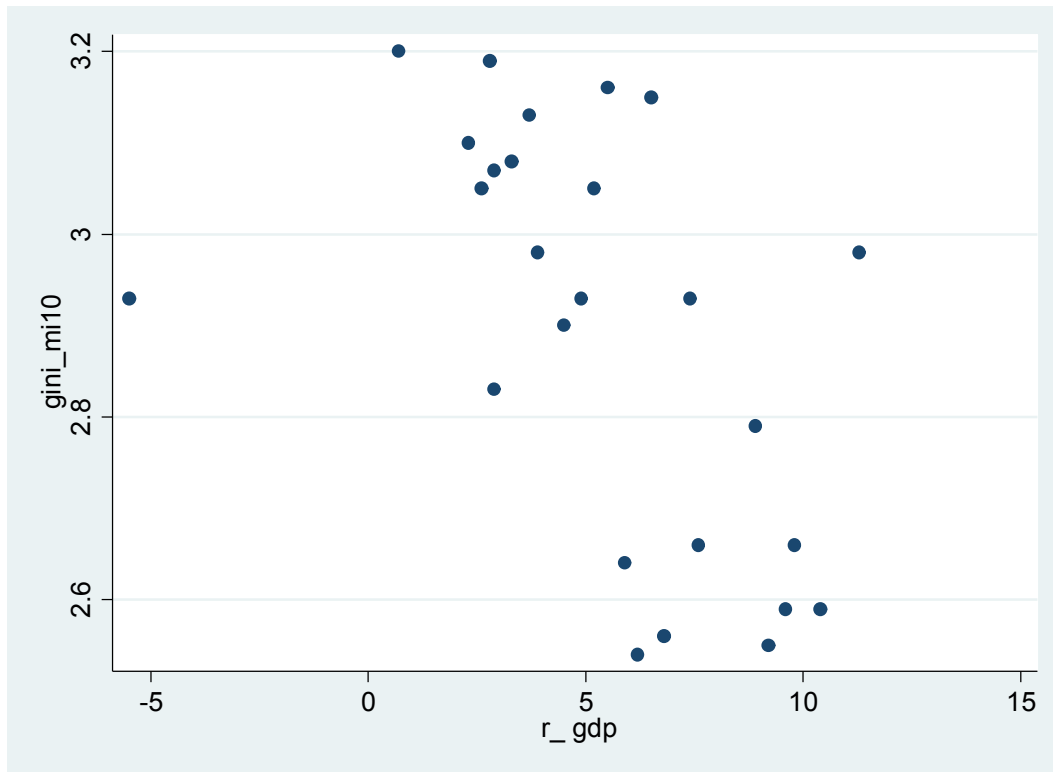
<부록표-1> 실질경제성장률과 지니계수증가율 관계 추정식

	시장소득 지니계수 증가율	시장소득 지니계수 증가율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 증가율
	(eq-1-1)	(eq-1-2)	(eq-1-3)
상수항	0.0275 (0.01)**	0.0320 (0.01)**	0.0239 (0.01)**
실질경제성장률 (r_gdp)	-0.0041 (0.00)**	-0.0034 (0.01)*	-0.0041 (0.00)**
실질경제성장률, 연도 복합변수 (r_gdp*time)		-0.0014 (0.00)	
F 값	6.22	3.34	5.65
adj_R_square	0.178	0.163	0.162
표본수	25	25	25

주: 괄호는 표준오차,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부록 그림-1>은 시장소득기준 지니계수와 실질 경제성장률 간의 산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실질경제성장률과 시장소득기준 지니계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을 알 수 있다.

<부록 그림-1> 시장소득기준 지니계수 vs 실질경제성장률



소득분배불평등 원인과 완화방안

박 기 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소비의 이시적 대체 (intertemporal substitution)

$$1 + r_t = (1 + \rho) \left(\frac{U'(c_t)}{U'(c_{t+1})} \right).$$

$$U(c_t) \stackrel{\text{def}}{=} \frac{c_t^{1-\theta} - 1}{1-\theta}.$$

$$1 + r_t = (1 + \rho) \left(\frac{c_{t+1}}{c_t} \right)^\theta.$$

$$\text{Let } 1 + g_{t+1} \stackrel{\text{def}}{=} \frac{c_{t+1}}{c_t} = 1 + g \text{ in } S-S. \quad \theta \approx 2.$$

$$\frac{1 + r_t}{1 + g_{t+1}} = (1 + \rho)(1 + g): \text{const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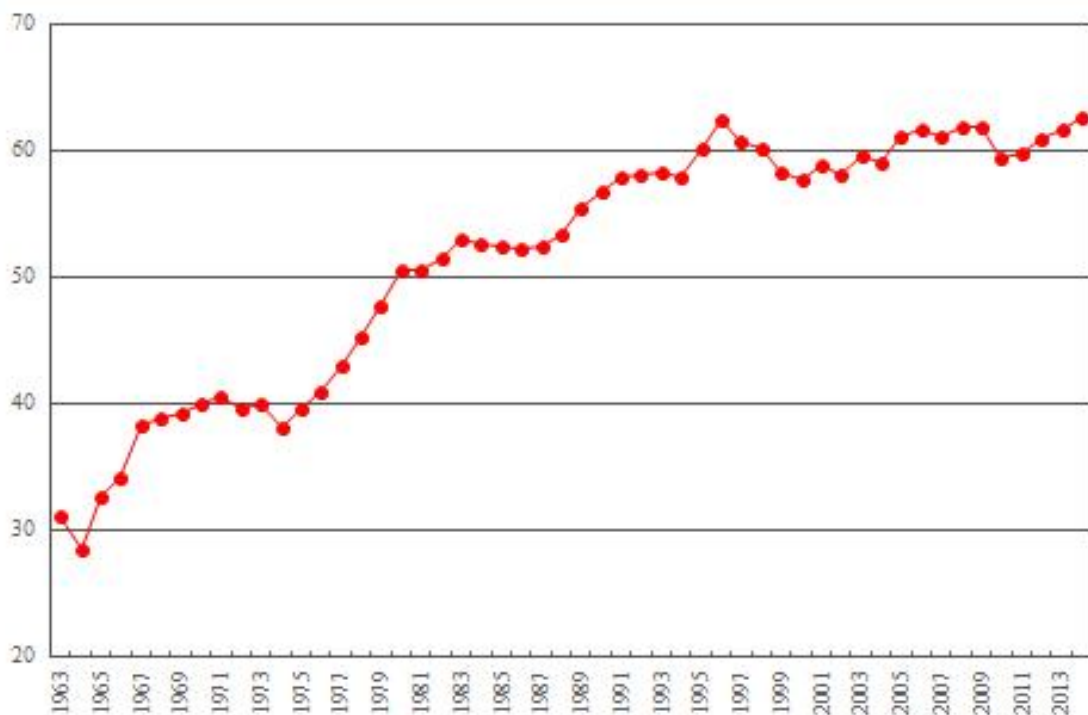
Piketty's Theory: Wrong

$$\alpha_t \left(\stackrel{\text{def}}{=} \frac{r_t K_t}{Y_t} \right) = r_t \beta_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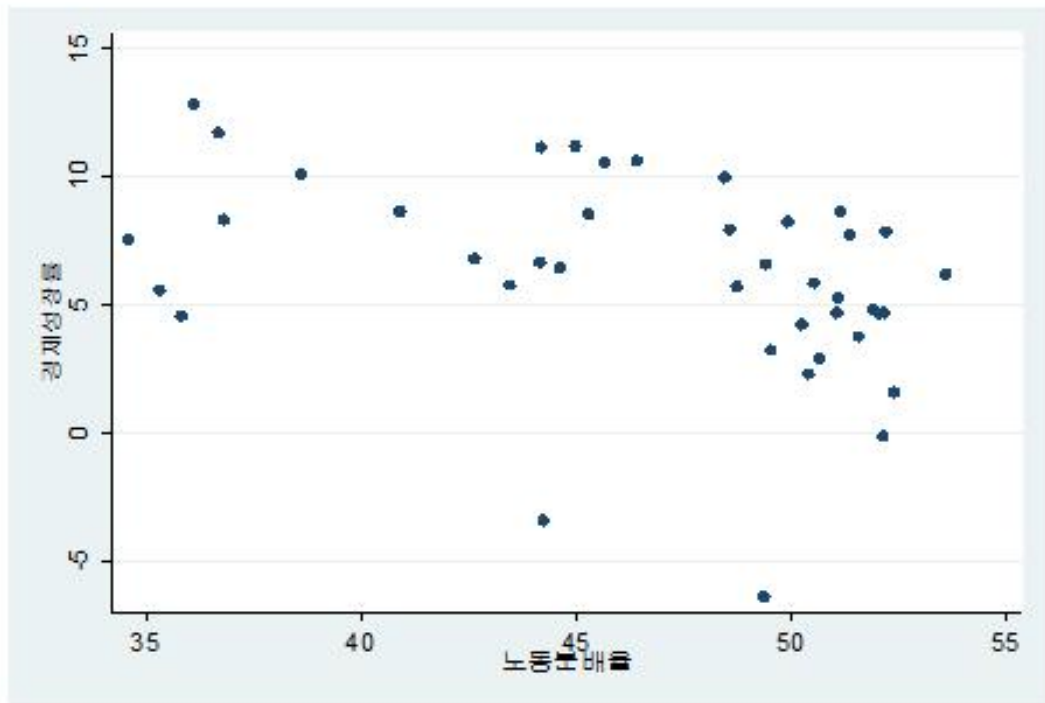
$$\beta_t \left(\stackrel{\text{def}}{=} \frac{K_t}{Y_t} \right) = \frac{s_t}{g_t}.$$

$$\alpha_t = \frac{r_t}{g_t} s_t; \text{const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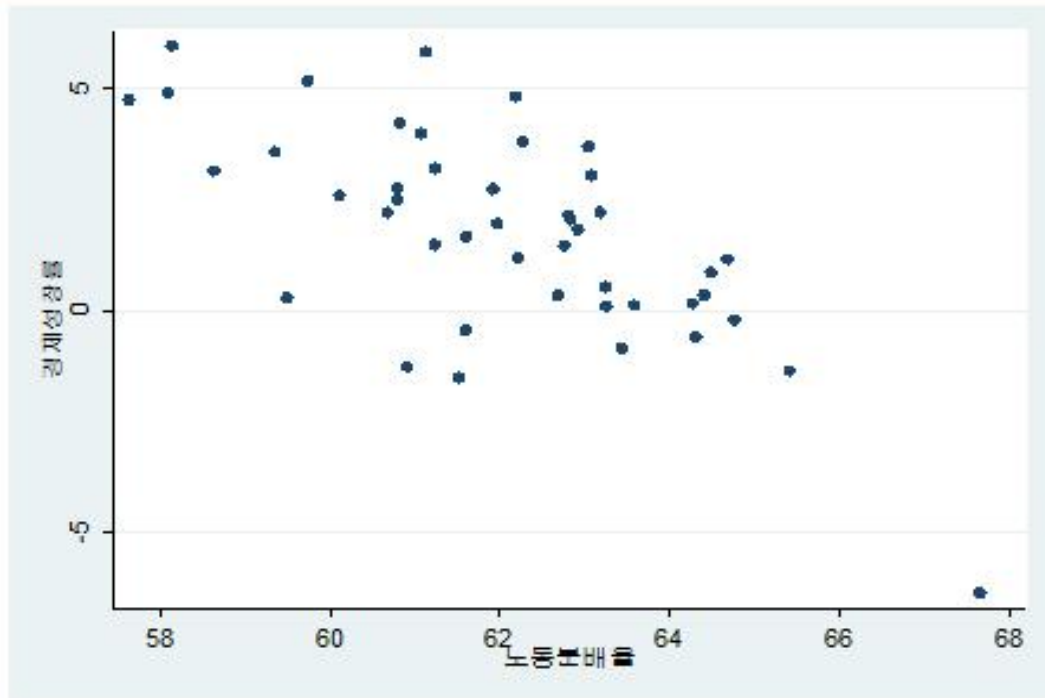
노동소득분배율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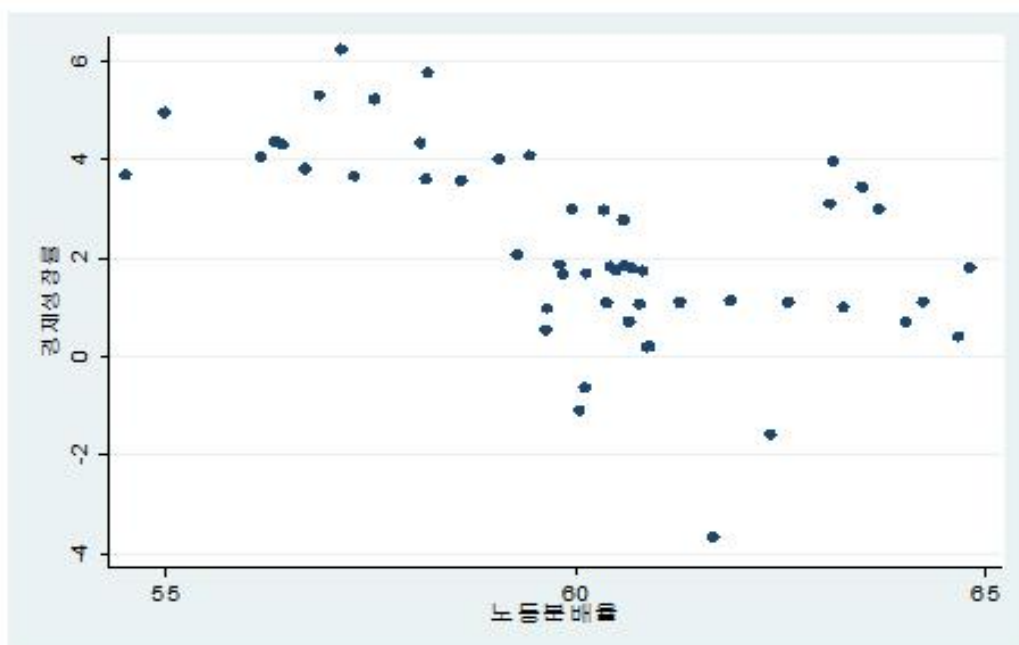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성장률 (한국 1971-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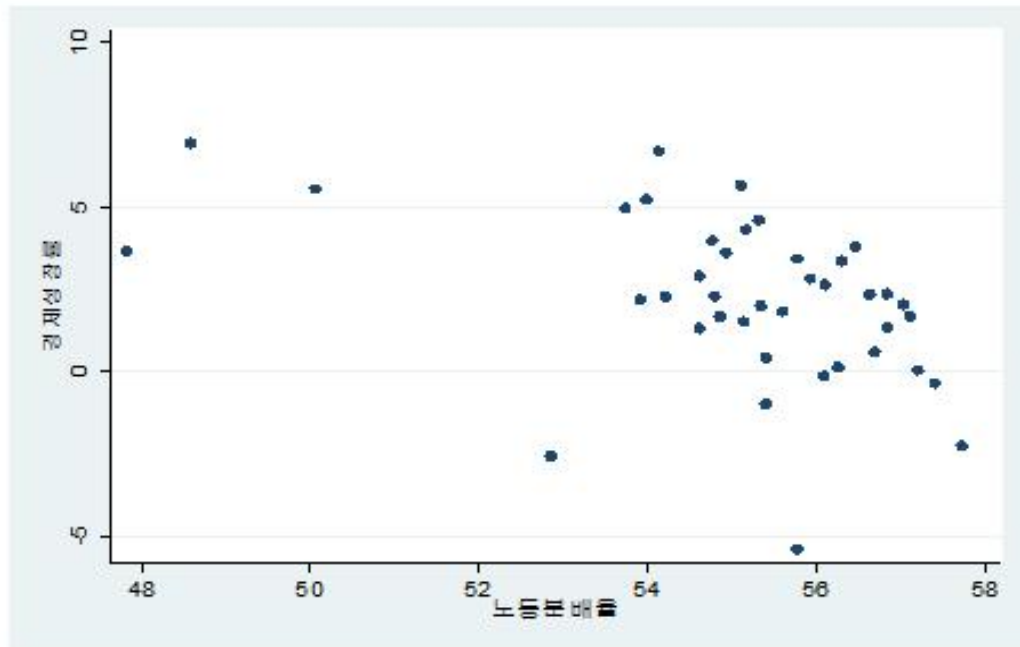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성장률 (덴마크 1967-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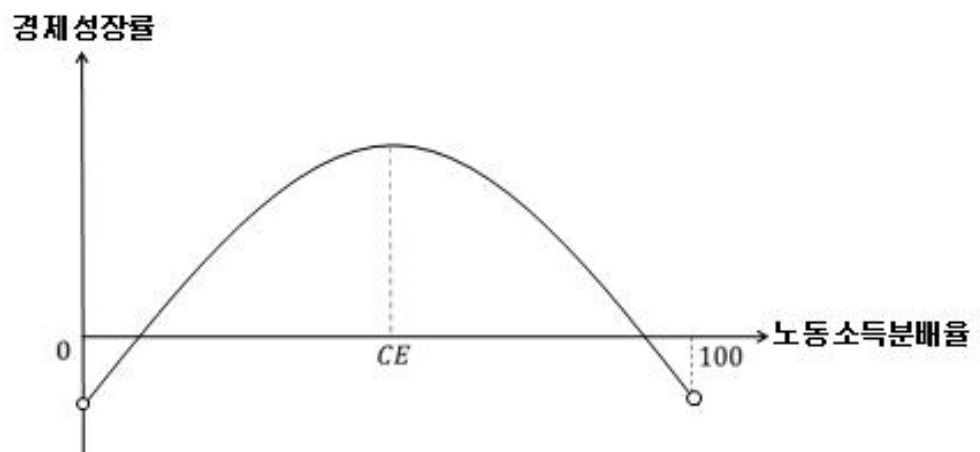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성장률 (프랑스 1961-2011)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성장률 (일본 1971-2010)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성장률 (Kim and Park 2015)



<표 1> 경제성장을 회귀분석 (Kim and Park 2015)

	(1)	(2)	(3)
전년도 일인당 GDP의 로그	-0.0865*** (0.0089)	-0.0792*** (0.0089)	-0.0775*** (0.0089)
출산율의 로그	-0.0439*** (0.0085)	-0.0388*** (0.0084)	-0.0425*** (0.0085)
1/(출생시 기대수명)	-8.9324 (7.0944)	-10.9709 (7.0182)	-8.6215 (7.0252)
투자/GDP	0.2659*** (0.0287)	0.2953*** (0.0291)	0.2978*** (0.0289)
여성 교육연수	0.0089** (0.0039)	0.0091** (0.0039)	0.0074* (0.0039)
남성 교육연수	-0.0095** (0.0038)	-0.0098*** (0.0037)	-0.0089** (0.0037)
정부소비/GDP	-0.3502*** (0.0056)	-0.1761*** (0.0067)	-0.1651** (0.0670)
무역의존도	0.0388*** (0.0062)	0.0333*** (0.0063)	0.0345*** (0.0063)
물가상승률	-0.0678*** (0.0139)	-0.0682*** (0.0137)	-0.0708*** (0.0137)
노동소득분배율	-	-0.1621*** (0.0360)	0.4592** (0.2114)
노동소득분배율×노동소득분배율	-	-	-0.5818*** (0.1951)
R^2	0.6484	0.6578	0.6619
국가수	32	32	32
표본수	809	809	809

주: 국가 및 연도 고정효과 더미 포함.

<표 2> 남자 정규·비정규근로자 임금격차 (박기성·김용민 2007)

	299인 이하	300인 이상
노동조합 무	2.9%	28.5%
노동조합 유	24.5%	32.3%

주: 사업제 고정효과 더미 포함.

연도	소득5분위배율		지니계수		정부
	시장소득	가치분소득	시장소득	가치분소득	
1990	3.93	3.72	0.288	0.258	노태우
1991	3.77	3.58	0.259	0.250	
1992	3.71	3.52	0.254	0.245	
1993	3.84	3.7	0.258	0.250	김영삼
1994	3.78	3.61	0.255	0.248	
1995	3.85	3.68	0.259	0.251	
1996	4.01	3.79	0.288	0.257	
1997	3.97	3.80	0.284	0.257	
1998	4.78	4.55	0.293	0.285	김대중
1999	4.93	4.62	0.298	0.288	
2000	4.4	4.05	0.279	0.268	
2001	4.68	4.29	0.290	0.277	
2002	4.77	4.34	0.293	0.279	
2003	4.86	4.28	0.283	0.270	노무현
2004	4.84	4.41	0.293	0.277	
2005	5.17	4.55	0.298	0.281	
2006	5.38	4.63	0.305	0.285	
2007	5.79	4.84	0.316	0.291	
2008	5.93	4.88	0.319	0.294	이명박
2009	6.11	4.97	0.320	0.295	
2010	6.02	4.82	0.315	0.289	
2011	5.96	4.82	0.313	0.289	
2012	5.76	4.67	0.310	0.285	
2013	5.70	4.56	0.307	0.280	박근혜
2014	5.67	4.42	0.308	0.277	
2015	5.67	4.20	0.305	0.269	

[토론 ②]

소득분배불평등 원인과 완화방안

오 형 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운과 능력

=롤스의 정의관: 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 존엄성 등에 선천적 요인에 의해 차별받아선 안 된다

=어디까지가 선천적이고, 어디까지가 후천적인가

: 지적능력(두뇌)과 외모, 인내심, 자제력 등은 어디서 온 것인가.

=하이에크 “아무리 공정한 규칙도 선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자유주의가 양극화를 유발했다면 반자유주의적 체제가 양극화 해소했어야

◆빈곤과 불평등

=불평등은 개인 능력차가 원인인가, 사회제도가 원인인가

: 원시 공산사회에도 개인 능력차에 따른 불평등 존재.

: 개인의 생산성 차이에 비롯되는 불평등

(누군가의 소득 증가가 타인의 희생 결과인가. 상속과 선천적 재능은?)

=세상 어디에도 빈곤 없는 사회는 없다

: “상대적 빈곤은 배의 흡수와 같다”(아무리 소득 향상돼도 존재)

=상방이 아닌 하방 개선으로 접근해야

: 아웃라이어가 많아 불평등한 게 아니다. 절대빈곤 개선이 해답

: 기업가의 기민함에 기인한 소득격차 인정하지 않는 풍토

◆자유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왜곡된 시각

=봉건사회에서 시민사회의 근대적 각성 없이 타율에 의한 근대화

=유교적 사농공상 신분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농본주의적 사고방식

: 개인보다 공동체, 사익보다 공익, 자유보다 통제, 자유보다 간섭에 익숙

=개인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가 충돌할 때 갈등해소 난망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전근대적 제로섬 사고

◆경직된 노동시장에 의한 양극화

=노동시장의 카스트화: 대기업 정규직(100), 대기업 비정규직(60), 중소기업 정규직(50),

중소기업 비정규직(35)

: 산업구조 변화흐름에 역행하는 노동법과 노동관행의 계층간 칸막이
=저성장, 생산성 괴리된 임금경직성, 투쟁을 통한 지대추구가 주된 원인
=무엇이 공정한가: 저성장, 귀족노조, 사회적 착취구조 등 혁파돼야

[토론 ③]

소득불평등 요인과 완화 방안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부 교수

소득불평등 요인

인간 사회에서 개인 간 소득격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문제 삼아야 할 것은 개인 간 소득격차가 아니라 부익부빈익빈이다. 소득격차는 어느 한 시점과 관계있는 정태적 개념이고, 부익부빈익빈은 시간에 걸쳐 파악되어야 하는 동태적 개념이다. 10년 전보다 소득격차가 심해졌다는 것은 10년 전이라는 한 시점과 10년 후의 한 시점과 비교해서 나온 결과다. 이것을 두고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욱 가난해졌다고 말할 수 없다.

부익부빈익빈이 되기 위해서는 10년 전에 부자였던 사람이 지금 더욱 부자가 되어 있어야 하고 10년 전에 가난했던 사람이 지금 더욱 가난해졌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부익부빈익빈은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에 속해 있는 개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계층으로 이동할 수 없을 경우에 성립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소득격차는 이러한 계층 간 이동과는 무관한 개념으로 소득격차만을 보고 개인들이 계층 간 이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

보통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소득격차, 혹은 소득불평등도의 정도를 말한다. 지니계수가 높아지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소득격차가 커졌다고 말하고, 지니계수가 낮아지면 소득격차가 줄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지니계수는 단순히 특정년도 또는 현재의 소득 순위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차이만을 말해준다. 이 지니계수로는 계층 간의 이동을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지니계수가 커진 것을 보고 그 시점에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소득격차가 과거보다 커졌다고는 말할 수 있으나 부익부빈익빈을 운운하는 것은 잘못이다.

신분사회가 아닌 현대사회에서 부익부빈익빈이 일어나는 사회는 정부가 경제에 깊숙이 개입함으로써 나타나는 정실주의 사회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소득불평등은 발생할 수 있지만 부익부빈익빈은 발생하지 않는다. 계층 간의 이동이 빠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없애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발생하는 소득격차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적응능력에 따라 소득격차가 발생하지

만 거의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한다. 그래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우에는 소득격차에 대한 불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성장이 둔화되면서 생기는 소득불평등은 문제가 되는 경향이 많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가장 먼저 피해보는 사람들이 서민들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일자리가 줄고 소비가 감소한다. 일자리를 잃어 임금 이외의 소득이 없는 서민들은 고통을 겪게 된다. 그리고 소비가 감소함으로써 소규모 자영업자 역시 소득이 감소하여 고통을 겪게 된다. 임금 이외의 소득이 있거나, 숙련 노동자들,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더라도 생활과 저축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소득격차가 더욱 심해진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소득격차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장기침체에 빠져 있다.

소득불평등 완화 방안

소득격차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저성장에서 탈출하여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하고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수행해야 한다. 먼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간투자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경제성장은 민간투자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간투자는 기업의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기업환경이 악화되어 기업의 투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민간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보다는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조치들을 많이 취해왔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를 거쳐 오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세금이 늘어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친노정책으로 일관하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도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기업규제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정부규제들이 기업환경을 악화시켜 민간투자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침체에서 벗어나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에 가하고 있는 수많은 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해야 하고,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를 인하하여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보호법을 폐지하고, 과도한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여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민간투자가 늘고 경제가 성장하며 일자리가 창출되어 소득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

[토론 ④]

신(新)자유주의가 양극화 초래 했는가

-소득불평등 요인과 완화방안-

김 영 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 양극화에 대한 팩트(facts)와 오해

- 발표자께서는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서부터 양극화에 대한 오해가 시작될 수 있다고 지적
 - 현실 세계에서 ‘선천적 DNA’(Y)와 ‘운’(Z)은 독립적으로 작용
 - 미제스(Mises) 제시하는 것처럼, ‘선천적 DNA’가 좋은 사람일수록 일과성(一過性)운을 ‘기회로 포착’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주장
 - 이는 양극화뿐만 아니라 성공과 실패를 이해하는 중요한 가설로 인식되므로 검증가능하다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임
 - ‘양극화’라는 용어는 이성적 판단을 하계끔 하는 경제용어가 아닌 감성을 자극하는 정치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 신자유주의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마치 신자유주의가 양극화를 가져온 원인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을 비판
 - 김경수의원 대표발의(‘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의 예를 들면서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은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성장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정치적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
 - 이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진정으로 구현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현실의 문제가 신자유주의 탓으로 나타난 것처럼 매도
 - 현실에서는 여전히 시장에 대한 정치적 개입과 규제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

2.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합리적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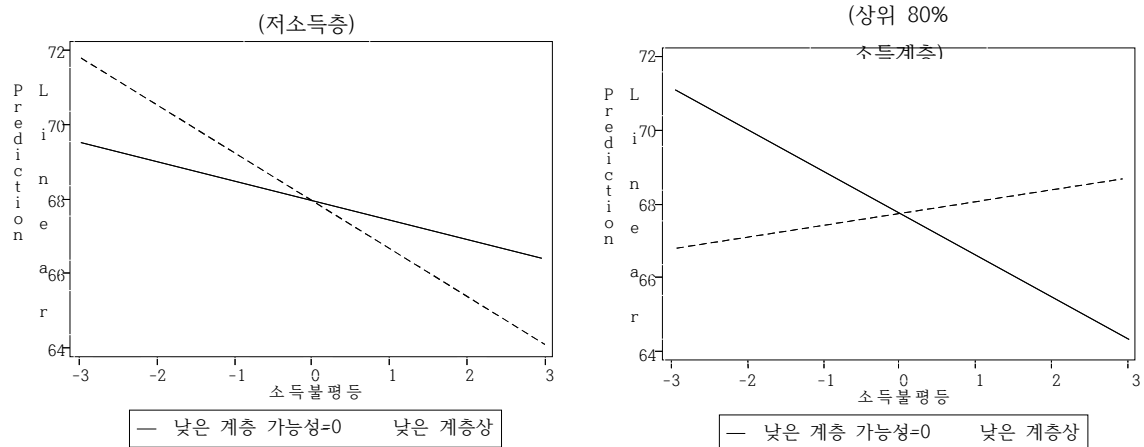
-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양극화 및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사실을 구분할 필요성
 - 소득(및 부)의 양극화는 분포가 특정 수준을 중심으로 양 극단으로 모여 있는 것을 의미
 - 소득 불평등도는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로 측정
 - 그런데 지니계수는 동일할지라도 소득격차는 발생할 수 있음.

만약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 모두 동일한 성장률로 증가한다 하더라도 소득분포의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절대적인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지니계수는 자산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으로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한계 있음

- 발표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구성원의 소득분포에 대해 적절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적정 불평등’을 사전에 정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합리적인 적정수준을 산출할 수 있고, 그 수준에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지 의문시 됨
- 또한 발표자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사회구성원 가운데에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해서 문제해결에 대한 합리적 접근이 어렵게 됨

<그림> 소득수준 집단별 낮은 주관적 계층상승가능성의 한계 효과 비교



[주] 김현정(2016)에서 인용

3. 소득불평등 개선방향

- 소득분배와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은 매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
 - 특히 지니계수와 실질경제성장률의 추세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임.
빈곤층비율 및 부유층 비율은 실질경제성장률과 반대방향으로 나타났고, 부유층 비율은 동일한 방향으로의 추세를 보임.
 - 결국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질경제성장률이 높아져야 한다는 시사점 제공
 - 중앙정부지출과 소득재분배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발제자께서도 지적했듯이, 국내외 많은 실증연구들은 과도한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개선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
- 발제자께서 제시한 것처럼 노동시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조가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완화되어야 할 필요성

- － 노동조합을 통한 지대추구적 임금이 아니라 생산성에 기반한 공정임금
이로 인해 동일 직장내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확대를 완화
- 정상이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이익을 얻기 위한 지대추구활동으로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
되는 것을 해결할 필요성¹²⁾
 - － 사회적 배제와 차별예방을 위하여 부패와 부조리의 근인을 제거하고 원칙을 바로세
울 필요성
- 이를 위해서는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지대추구유인을 최소화해야 함
 - － 시장규제가 독점적 지대를 형성 가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 － 규제를 완화하여 새로운 사업의 출현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

12) 김영신 (2016) 참고.

<MEMO>

[illegible]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길 38(북창동) 단암빌딩 별관 3층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